

“남해안권 개발”... 여야 의원들, 특별법 공동 발의

광주·전남·경남 의원 등 21명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기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정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등이 함께 국회에 제출된 만큼 남해안권이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회재 의원(민주당·여수)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김승남·김원아·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재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

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제출로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을 국가 균형발전 중심이자 관광 일번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의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골자로 해 남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

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 의원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 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소 의원의 법안은 남해안 발전 사업이 새로운 경제축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으로 전남·경남·부산 등지에 남해안 벨트가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

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소 의원은 지난 3월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바 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글로벌 외교 승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인권 보편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 공여 외교 펼쳐온 윤석열 외교가 국제사회 공

감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국가 192개국 중 3분의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됐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2013~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국노총 긴급중앙집행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7일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 강경 진압·구속에 반발, 이날 사회적 대화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1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시민단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 과연 국가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에 합당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의당 대표는 “참사 이후 222일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망언과 2차 가해를 일삼던 국민의힘은 어렵게 이뤄낸 이태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더니 특별법 공동발의는 거부했다. 정부 부처는 이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참사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협 등은 호소문을 통해 이달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달 16일 참사 2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내놓은 호소문에는 참사 1주기까지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의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으려면 행안위는 적어도 이달 중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이래경 낙마’에 “결과에 무한책임지는 게 대표”

“어떤 방식 책임” 질문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와 관련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이 대표의 책임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내, 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내정 사실을 발표 하루 전날 저녁에 박광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이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의 임명 사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혁신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와 협의의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이 이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당시 회의에서 이 대표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추천이 있었다. 이 이사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이고 고사하는 입장이었는데, 함 신부를 비롯한 분들이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與 공천·입법 로비 진상조사단 출범”

‘공천 현금’ 진상조사단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천로비·입법로비 진상조사단을 이번주에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황보 의원 등 공천 현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공천 비리뿐만 아니라 공천로비·입법로비 진상조사단을 이번주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입법 로비와 위메이드가 허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을 당시의 보좌관이

의원실을 퇴직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하고 반년만에 공동대표가 된 것의 진상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하영제·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순자·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현금 의혹을 겨냥한 ‘공천 현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